

4. 하반기 경제 정책 전망(III) : 금융 구조조정

- (중점 과제)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시행하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, 외환·금융 거래 자유화 실시
- (주요 정책 내용) ▷부실 금융기관 정리와 합병을 통한 금융기관 경영 정상화 및 경쟁력 제고 ▷자본자유화와 외국인 투자 일괄처리제, 외환·금융 거래의 완전 자유화를 목표로 법 개정 추진
- (정책적 보완 과제와 기업의 대응)
 - 정부: ▷금융산업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한 지원 ▷제2금융권 기업 자금 중개 기능 강화 ▷효율적 M&A시장 질서 확립 ▷자본 유출입 부작용 억제를 위한 외환보유고 확충 및 민관협조체제 구축
 - 기업: ▷환율·금리의 급변동이나 신용경색 지속에 대응하는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▷적대적 M&A에 대한 대비책 강구 및 국제금융시장 활용 방안 모색

□ 하반기 중점 과제

- (중점 과제)

- 부실 은행의 구조조정과 우량 은행의 경영정상화, 제2 금융권의 구조조정 조기 시행,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, 금융감독체계의 선진화를 추진
- 금융산업의 개방과 자본 자유화를 조기 시행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본격적인 개방 경쟁 체제를 구축해나가고,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도

□ 주요 정책 내용

<금융 구조조정>

- (은행 경영 정상화 추진)

- 조건부 승인 은행들은 7월말까지 경영개선명령 이행 계획을 제출, 평가받게 되며, BIS 비율 8%가 넘는 12개 은행들은 8월말까지 평가를 받게 됨
- (서울·제일은행 매각) Coopers & Lybrand를 통해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고 해외 인수자를 물색중임. 정부는 11월15일까지 민영화되지 않으면 합병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임
- (대형·우량 금융기관 합병)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본격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간 자율적인 합병·인수를 최대한 유도

- (제2금융권의 구조조정 추진)

- 1차 구조조정 이후에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적기 시정조치를 통해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해진 조치가 자동적으로 적용될 예정임
-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주주 책임하에 일단 9월말까지 1차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 될 예정이며, 부실 보험사는 8월에, 부실 증권사는 9월에 선정, 퇴출될 것이며, 투신사는 9월중 경영개선조치가, 신용금고도 10월중 대거 퇴출될 수 있음

<금융·자본 자유화>

- (외국인 투자 자유화)

- 적대적 M&A를 포함한 모든 M&A 전면 허용, 외국인 직접투자 업종 제한을 철폐하여 투자자유화율을 98.8%까지 높임(13개 업종 미개방, 18개 업종 부분 개방)
-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정(2000년~2002년)이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가능

- (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)

- 98년 하반기중 일괄처리제 도입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·허가의 직접처리 및 투자절차 대행 등 One-Stop 서비스 제공
- KOTRA를 투자유치 전담기구로 개편하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
- 외국인 투자 관련 공장설립 민원 등에 대해 만료일후 자동 승인제 도입

- (외국환 관리법 전면 개편)

- 현행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을 금년내 제정, 1단계로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한 후 2단계로 모든 외환 거래를 전면 자유화
- 자유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화유출입 동향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체계, 핫머니의 과다 유출입 억제를 위한 외화가변예치제 도입, 국제적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 유기적 정보교환 체제 마련

- (국내 기업의 외환 및 금융거래 자유화)

- (98년 하반기-조기자유화) 기업의 단기무역신용 완전자유화, 기업의 중장기 외화 자금 조달 자유화
- (99년 4월-1단계 자유화) 수출입 결제 방법, 상계에 대한 제한 철폐, 기업의 해외 예금 및 신용공여 자유화, 기업의 해외부동산 및 금융업 관련 해외 직접투자 등
- (2000년 1월-2단계 자유화) 기업의 1년 이하 단기차입 및 해외증권 발행, 파생상품 직거래 허용

□ 정책적 보완 과제와 기업의 대응

- (금융구조조정상의 정책적 보완 과제)

-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입법화 지연으로 은행 경영 정상화를 둘러싼 모든 정부 조치들이 불법 시비를 불러일으킬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요망됨
- 자금 경색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은행의 BIS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형식적인 집행보다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
- 은행의 공공성이 유지되는 한도에서 상업성을 최대 보장하는 자세 필요
- 제2금융권이 담당해온 기업금융 중개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자금난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2금융권의 자금 중개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절실
- 한편 금융기관 소유·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나 수요자 중시 논의가 미흡함.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요구됨

- (금융·자본 개방에 따른 정책적 보완 과제)

- 적대적 M&A의 허용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따른 비용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M&A 절차에 대한 시장 투명성을 제고시켜 효율적인 M&A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임
-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도 정비외에 관련 담당자의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도 중요
- 자본 유출입의 부작용에 대한 효율적인 보완 대책으로서 외환보유고의 확충과 선물환 및 역외 금융 거래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민관 협조 체제가 필요
- 기업 구조조정 및 외화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외환 자유화 계획보다는 외화 자금 유치에 대한 규제 및 법률 해석을 보다 융통성 있게 시행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자금 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
- 서구의 대형 은행들에 위협당하고 있는 국내 은행과 여신전문 금융기관의 수익 기반 방어를 위한 보완 대책 수립도 요구됨

- (기업의 대응 과제)

- 기업은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가속화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는 것에 대비하고, 환율·금리의 급변동이나 신용경색 등 위험관리가 필요
- 또한 외국인의 적대적 M&A, 금융 국제화를 맞이하여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노하우 습득을 꾀하고 적극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

(금융연구실 jklim@hri.co.kr ☎724-4018)